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김흥종 원장
2. 출장기간: 2023.4.14-2023.4.18(3박 5일)
3. 출장지: 미국 콜로라도 볼더
4. 출장목적: KIEP-KAEA 워크숍 주관 세션 발표 및 토론

II. 출장일정

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4월 14일	덴버	· 이동(인천 → 덴버, 시애틀 경유)	KE 041 KE 3045
4월 15~16일	볼더	· 세션 발표 및 토론	
4월 17~18일	인천	· 이동(덴버 → 인천, LA 경유), 18일 도착	AA3166 KE 018

III. 활동내용(요약)

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목적 달성도	비고
세션 주관	·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주최 세미나 주관 · 한미경제학회와 향후 일정 논의	100%	-

IV. 관찰 및 평가

- 한미경제학회(KAEA)와의 보다 밀접한 교류를 위하여 KIEP-KAEA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 소속 연구자들은 paper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 성과물들의 품질을 제고하고 상호 호혜적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
- 북미 학계 연구자들의 경우 최신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강점을 보였는데,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들의 지역 및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지식 자본과 호혜적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 연방준비위원회 및 연방준비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정책연구의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향후 연방준비은행 소속 한국인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후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 간에 정기적인 접촉이 필요하며, 원내 연구 진행에서 적극적으로 자문하거나 외부 집필 요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연례행사로 제도화하여 정기적으로 한미경제학회와 학술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임.

V. 상세내역

1. 세션별 논의사항

1) 4/15, 오전 제1세션 (9:00~10:00)

- 개회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장유순 교수, KAEA 간사 이윤석 교수
- 정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사들과 학술연구자들의 모임인 한미경제학회의 정책·학술 연구 교류가 성사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향후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더 많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았으면 함.
- [Keynote Presentation] How Do Macro-aggregates and Income Distribution Interact Dynamically? A Novel Structural Mixed Autoregression with Aggregate and Functional Variables
- 발표자: Indiana University 장유순 교수
- 내용 요약: 소득 불평등은 거시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소득 분포의 동인을 추적하는 연구가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의 미시 데이터와 산업생산, CPI, 상품가격, 연방기금금리, 지니 지표 등의 거시 데이터 자료를 연계하여 거시 변수와 소득 분포의 모양 및 거시 충격을 함수 접근법을 통해서 비모수적으로 추정하고, 향후 이질적 동태일반균형 모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조 벡터자기회귀 모형 결과를 제시함. 소득 분포의 함수는 3개의 주요 성분에 의해서 설명되며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누진적인 소득 분배 효과를 가져옴. 전체 소득 규모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득분포 양극단을 줄이고 중간 소득 계층을 늘림. 그러나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역진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가짐.

<토론>

- 미시/거시 시계열을 요약하는 주성분 함수 접근법은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결과임. 3개의 주성분은 소득 분포에 매우 이질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분배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이 크며, 이 주성분에 대한 메커니즘 탐색을 더 심도 있게 수행하여 정부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4/15, 오전 제2세션 (10:30~12:00)

□ An Analysis on the Predictors of Financial Crises Using Machine Learning

- 발표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백예인 부연구위원
- 내용 요약: 서로 다른 금융위기 간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으로 추정된 금융위기 예측모형에서 변수들의 기여도를 분석함. 기존 금융위기 예측모형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이용한 연구들이 최근에 늘고 있으며, 본 연구는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방법을 이용해 금융위기 예측모형의 변수 기여도를 측정함. 회귀 트리와 랜덤포레스트 방법론으로 1870~2017년까지 18개국의 금융위기 예측모형을 추정한 결과 수익률곡선(장단기금리차)이 금융위기 예측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수로 나타남.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북유럽 3개국 은행위기를 살펴보면 수익률곡선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여섯 개의 예측변수(수익률곡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CPI, 자본수익률, 정부 부채)가 일치하며 순위도 거의 비슷함. 차이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 글로벌 신용, 글로벌 수익률곡선이, 북유럽 은행 위기는 투자, 경상수지,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토론>

-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에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예측모형에 사용했지만, 사전에 변수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측변수 간의 상관관

계 등을 고려한 후 금융위기 예측모형을 추정한다면 더욱 정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임.

□ Going Back To School: Effects of School Closure On Post-pandemic Schooling Choices in Ethiopia

- 발표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지영 부연구위원
- 내용 요약: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개발협력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23년 국제개발협력센터 기본과제의 일환으로 교육 불평등에 관한 에티오피아 사례를 분석함. 특히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학생 중 학교 봉쇄 해지 이후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학교 봉쇄 기간이 학생의 특징에 따라 학교등록률에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교에 등록할 확률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교 폐쇄 기간이 길수록 학교에 등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코로나19가 학교 봉쇄 중뿐만 아니라 봉쇄 이후에도 개발도상국 교육의 양을 낮추며 교육 불평등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줌.

<토론>

- 학교 폐쇄가 없었을 때 학교등록률, 즉 counterfactual 학교등록률을 분석에 추가한다면 학교 폐쇄가 학교등록률에 미치는 marginal 한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전 가구의 학교등록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에티오피아 사례를 다른 개발도상국의 사례와 비교분석을 한다면 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Excess Savings - According to FR-HANK

- 발표자: Federal Reserve Board 심재웅 박사
- 내용 요약: 코로나 시기의 바이든 정부의 정부 지출은 2021년 3분기 이후 2.2 trillion dollars의 초과 저축(excess savings)을 초래하여 확장적 통화 정책과 유사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러한 초과 저축 및 이전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리카디안 등가의 법칙에 따라 상쇄된다는 입장이 대립함. 본 연구에서는 리카디안 등가의 법칙이 HANK 모형에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함. 표준적인 중규모(medium-scale)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 motive)를 지닌 이질적인 가계를 중심으로 CARES 및 ARPA 법에서의 이전지출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반영한 기간 간 할인인자의 변화를 통한 경로를 통해 초과 저축 상황을 일반균형 내에서 복원함. 유동성 제약 소비자(HTMs: hand-to-mouth consumers)는 1분기 내 기간 간 한계소비성향이 높지만, 가난하지만 유동성 제약에 빠지지 않은 소비자(NHTMs: non-hand-to-mouth consumers)는 그보다 낮고, 부유한 NHTMs는 소비 성향이 거의 올라가지 않음. 부유한 NHTMs에서 초과 저축 기여분이 높고, 가난한 NHTMs, HTMs 순으로 기여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모형 캘리브레이션 결과 미국 내 초과 저축의 규모는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2025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는 증가하지만, 투자는 구축(crowd-out)되어 총생산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음. 인플레이션 수준은 2023-24년 동안 상방 압력이 작용하고 이 기간 이후 균형 수준으로의 복귀가 예상됨.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부정적인 일반균형 효과로 인해 가난한 가계에서의 초과 저축이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임.

<토론>

- 부유하지만 유동성 제약에 빠진 소비자(wealthy HTMs)는 다른 3개 그룹의 소비자에 비해서 기간 간 소비 성향 및 초과 저축이 어떻게 될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총 4개 그룹의 소비자들의 상호 작용 및 통화정책의 방향에 따라 일반균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3) 4/15, 오후 제1세션 (13:30~15:00)

□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 발표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남석 부연구위원

○ 내용 요약: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이 보호무역에 대해 갖는 태도가 핵셔-올린 모형 등의 요소 부존 국제무역 모형의 예측에 부합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를 공유함. 핵셔-올린 정리 (2-섹터, 2-생산요소)에 따르면, 자본 부국에서 자본 소유자는 자유무역을 통해 양의 후생 효과를 누리지만, 노동 소유자는 음의 후생 효과를 누리. 이에 반해 노동 부국에서 노동 소유자는 자유무역을 통해 양의 후생 효과를 누리지만, 자본 소유자는 음의 후생 효과를 누리.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 부국인 필리핀, 태국에서는 인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유권자일수록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필리핀, 태국보다 자본 부국으로 분류되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인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유권자일수록 낮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이번 발표에서 공유한 회귀분석 결과는 위와 같은 이론적 예상에 부합

<토론>

○ 유권자가 종사하는 산업부문에 따른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차이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함. 특히, 유권자가 비교우위 산업에서 종사하는지 여부는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그리고 이론에 따르면, 교역이 불가능한(non-tradable) 산업군에서 종사하는 유권자들은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 이에 관해 어떻게 분석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고, 발표자가 고려 중인 분석 계획을 공유함.

□ Trade Policy Uncertainty, Offshoring, and the Environment: Evidence from US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 발표자: HEC Montreal - U Montreal Business School 현정식 교수

- 내용 요약: 미국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외생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적 실험 상황인 대중국 영구정상 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활용함. 1997년부터 2017년 사이의 기업 수준의 오염 배출 데이터 및 기업 특성(수출입 활동과 자회사 설립분포를 포함) 데이터를 통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감소가 기업 수준에서 독성 오염 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함. 이런 배출 저감은 주로 배출 강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 규모 축소에 의한 것이 아님. 특히 배출 감소는 외국에서의 조달 네트워크가 있는 기업 및 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 환경에 노출된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또한 배출을 많이 하는 미국 제조업자들이 PNTR 이후 중국에서 물품 조달을 증가시키고, 중국에 더 많은 자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오염 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토론>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기업 내 공장의 작업 대체(task substitution)에 의해 추동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시적인 증거들(공장 내 연구·개발 비용 증가나 기술 도입)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함. 특히 기업 내 공장가의 대체 등을 고려하면 더 복잡한 이질적인 결과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황 및 불황 시기의 배출 경향과 결합하여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nternational Trade and Macroeconomic Dynamics with Sanctions

- 발표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김대순 교수
- 내용 요약: 국가 간 제재(sanctions)가 국제무역 및 거시경제 동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국(two-country) 모형을 통해 분석함. 자국(home country) 및 외국(foreign country)은 서로 다른 상품(e.g., 가스 생산)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지니고 자국은 외국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 금융제재는 국제 채권시장에서 외국 경제주체들의 배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

러한 상황이 실현되었을 경우 금융 자립(financial autarky) 상황에 빠지게 됨. 본 연구에서는 또한 국제 가스 무역 금지와 외국 및 자국 수출업자의 일부를 국제무역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모형실험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재들은 자국 및 외국의 자원 재분배를 유발함. 환율은 제재의 성공 여부가 아닌 제재의 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후생 분석에서는 가스에 대한 제재가 자국에 더 치명적이며, 소비재에 대한 제재가 외국에 더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보여줌. 제3국의 참여는 외국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여주지만, 제3국은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 제재의 부과시에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음.

<토론>

- 표준적인 모형에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모형의 함의로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움. 이를 미국, EU 등의 서방 진영과 러시아 진영 간 제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서방 진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서방 진영의 국제적 협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모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음.

4) 4/15, 오후 제2세션 (15:30~17:00)

□ Industrial Policy, Rise of Skilled Labor, and Firm Growth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 발표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훈 부연구위원
- 내용 요약: 서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산업 정책의 양상은 매우 이질적으로 전개되어, 서유럽은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발달시키는 방향이었던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정부 주도로 계획적이었던 점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최근 산업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전하면서 기업의 성과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증가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숙련노동자의 양성 문제와 관련해 산업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음.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도성장기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숙련노동자 양성을 위해 산업단지 부근에 개설하였던 공업고

등학교 및 대학교의 현황을 추적하여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의 전개와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평가함.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은 △중화학공업육성과 관련된 새로운 학교들은 산업단지 근처 및 전국적으로 개설되었으며, △45세 이하의 젊고 학력 수준이 높은 고졸 이상의 근로자들이 주로 중화학공업 분야에 진출하였고, △중화학공업 분야 숙련 노동자의 비율은 1971~1986년 사이에 매우 높아졌으며, △중화학공업 분야의 저숙련 대비 고숙련 임금 프리미엄의 차이는 점차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토론>

- 학교 개황 현황지도는 매우 흥미로운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후의 산업 및 교육 불평등 구조와도 연결되진 않는지 파급경로 및 메커니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 이주(migration)가 산업 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함.
- 중화학공업육성 기간 석유파동 등과 같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연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ducation reform and behavioral response: evidence from South Korea
- 발표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황일명 교수
- 내용 요약: 1960-70년대의 한국 교육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능력분류 지연(delayed ability tracking) 상황에 대해서 실증 분석함. 당시 교육개혁은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엘리트와 비엘리트 중학교로 분류하는 관행을 종료하고 고등학교 진학 당시의 능력분류를 연기함.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입학 시점을 추론하여 입학시험의 중단 여부를 판별함에 따라 교육개혁이 단기 및 장기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함. 교육개혁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과 시간당 임금을 모두 증가시켰고, 인과적 매개 분석을 통해서 사교육을 통한 보충이 대학 졸업 및 시간당 임금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임을 보여주었음. 교육개혁은 가구 내 최적 반응과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개발도상국에서 예기치 못한 정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토론>

- 교육개혁에 대해 사교육비 지출을 내생적으로 선택하는 가구 모형 등을 상정하여 현재의 실증 분석 결과의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구의 부의 수준에 따라 사교육 지출의 학년 간 대체가 일어나는 상황이 매우 흥미로우므로, 이후 직무 및 일자리 선택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 결과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Status Externalities in Education and Low Birth Rates in Korea

- 발표자: University of Southampton 염민철 교수
- 내용 요약: 동아시아와 한국의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자녀가 고액의 사립 교육 기관이나 학원에서 저녁 및 주말에 많은 시간을 보냄. 동시에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임. 사교육비 지출의 외부효과(spillover effect)를 보여주는 실증 증거에 기반하여, 지위 외부성(status externalities)과 내생적으로 정해지는 출산율을 연결하는 모형을 제안함. 한국의 상황에 맞춰진 모형에 따르면 지위 외부성이 없었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지위 외부성이 있는 상황보다 28% 높았을 것이고, 가장 빈곤한 5분위 가계의 무자녀 비율은 5%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양한 정부 정책의 실험 및 조합에서, 출산장려금이나 교육세액공제 등은 출산율을 높이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소득 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22%의 교육세액공제와 적정 규모의 출산장려금이 현재 세대의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며, 평균 출산율이 약 11% 상승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3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세대의 복지를 높이지만 인적 자본의 감소에 따라 자녀 세대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음.

<토론>

- 지위 외부성의 실증 증거로 꼽히는 사교육비 지출의 외부성 분석의 경우 학원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피해서 교육하는 잠재 교육(shadow education)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변동분을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사교육비가 집중되는 것은 고등학교 이후인 데 비해 중학생 부분만 분석한 것은 한계임.
- 모형 분석의 핵심인 지위 외부성을 부여하는 카이 및 카파 모수 값을 캘리 브레이션이 아닌 데이터에서 직접 매칭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도 고려해볼 만 함.

5) 4/16, 오전 제1세션 (10:30~12:00)

□ The Impact of Trade Shocks from China and Vietnam on the Korean Labor Market: The Role of Industrial Linkages and Occupational Structure Change

- 발표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경현 연구위원
- 내용 요약: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국·베트남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함.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중국·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대중국·베트남 수출입의 급격한 증가로 산업 및 직종별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경험함. 대중국·베트남 수입 경쟁 심화 산업(예: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 통신기기 및 컴퓨터)의 고용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대중국·베트남 수출 증가가 컸던 산업(예: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의 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대중국·베트남 수출 증가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 증가보다는 밀접한 산업 연관관계에 있는 他산업에 대한 간접적 고용 증가를 더 크게 촉진한 것으로 나타남.

직종별 고용효과의 분석에서는 대중국·베트남 수입 경쟁 심화 직종(예: 섬유, 의복 관련직, 재료, 건설 관련직 등)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대중국·베트남 수출 증가 직종(예: 공학 기술자,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 경영 관련 전문직 등)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토론>

- 도구 변수 구성을 위한 비교국가 그룹 선택 기준에 대한 설명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다양한 강건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Economic Impacts of a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South Korean Experiments

- 발표자: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도태영 박사
- 내용 요약: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크게 상향 조정되어 임금 중앙값의 53%에서 63%로 상승함. 최저임금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18-19년의 급격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환경 변화로 촉발됨.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 (광업/제조업 조사 및 고용보험 DB, 일자리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및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연구함. 업종별 특정 요인이 주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함. 결과적으로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2015-17년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최저임금 충격에 노출된 기업 및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이 근로자 해고(intensive margin) 및 공장 폐쇄(extensive margin) 등으로 충격에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또한 최저임금에 더 많이 노출된 기업의 노동 생산성과 임금이 더 많이 증가함. 이 실증적인 결과는 서로 다른 기술 수준의 노동 간 대체를 직무 기반 생산함수 모형(task-based production model)의 예측과 일치함.

<토론>

- 현재 사용된 데이터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두 기간만을 비교하여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일반적 효과로 단정을 짓기는 어려움. 특히 2019년 이후의 기업 동학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구조적으로 고용 대체 및 기업 퇴출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Current Economic Issues in Cryptocurrency Industry

- 발표자: Michigan State University 김규일 교수
- 내용 요약: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급성장하였고, 주식시장과 다른 시장 특이성으로 인해 거시 변수와의 연계를 통해 거시/통화정책에 따른 충격 요소 및 규제 요소가 각 유동성 지표에 주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외국의 대형 은행과 투자회사들도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 구성에 늘려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유동성 평가 및 이해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짐. 가상화폐의 분권화 시스템의 특징으로 가상화폐 회사들은 거버넌스 공격에 자주 노출됨. 기업 탈취위험(takeover risk)을 줄이기 위해 최적 가중투표(VPA: multiple vote per account)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며, 이는 분권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이상 및 투표 유연성과도 연계되어야 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 잦은 해킹 시도가 있는데 이는 누가 해킹의 주체인지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함. 투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면 잠재적 공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도 장려하게 되고, 해킹 등에 대한 자동 식별 및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조세 회피 및 기프트세 이슈 등도 줄일 수 있음. 시장에 대한 규제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현재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와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 누가 규제의 주체가 될 것인가도 문제고, 너무 많은 규제는 시장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화가 필요함. 가상화폐의 채굴, 보유 등은 세금 목적상 근로소득으로 볼지, 투자소득으로 볼지 모호하며, 현재는 모두 투자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가상화폐의 공제 한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기업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시각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

순 투기로 보는 시각은 문제임.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하여 단일 공제한도로 적용하는 안이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임.

<토론>

- 통화규제 당국도 가상화폐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 것인지, 조세 당국에서는 설명한 대로 근로소득, 투자소득 분류의 문제도 있으므로 비공식 부문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규제를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늘려가는 것이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끝 -